

## 후쿠다 내각 발족과 ‘희망과 안심의 나라’

양기웅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 I. 후쿠다 내각 발족
- II. 국회소신표명
- IV. 일본국내정치 전망
- III. 대북정책 전망
- V. 마무리

### I. 후쿠다 내각 발족

자민당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재는 2007년 9월 25일 중의원 본회의의 수상지명선거에서 제91대 수상에 선출되었다. 후쿠다는 9월 23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330표를 득표하여 197표를 얻은 아소 전 자민당 간사장을 누르고 총재에 당선되었고, 25일 중의원 선거에서 총 투표수 477표 가운데 338표를 얻어 총리에 '사실상' 선출되었다. 여기서 '사실상' 선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참의원의 수상지명 선거에서는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대표가 수상에 지명되었기 때문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의 지명결의가 다를 경우 우선 양원협의회에서 조정하고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중의원 결의를 존중한다는 일본헌법에 따라서 후쿠다가 총리로 확정된 것이다.

후쿠다의 총리선출의 배경에는 첫째, 참의원 패배에 대한 아베-아소 연대책임론, 둘째, 후쿠다 리더십(균형감과 조정능력)에 대한 기대, 셋째, 자민당 파벌간의 지지연합 결성, 넷째, 모리와 고이즈미 전 총리 등의 지지 등의 복합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재-총리 선출과정을 살펴보면 고이즈미 시대 이후 약화된 파벌정치가 어느 정도 부활한 인상을 준다. 후쿠다는 당내 최대 파벌인 마치무라(町村) 파에 속하는데 마치무라파의 전신은 청화회(淸和會)이며 청화회는 후쿠다 수상의 부친인 후쿠다 타케오(福田赳夫) 전 총리가 1979년 출범시킨 자민당 파벌이다. 마치무라파는

후쿠다 타케오가 1986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친인 아베 신타로(安部晋太郎)에게 파벌 총수 자리를 넘겨준 이래 미쓰츠키 히로시, 모리 요시로, 마치무라 노부타카 등으로 파벌 총수의 자리가 승계되어왔다.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마치무라 파를 중심으로 자민당내 9개 파벌 중 8개 파벌이 연합하여(아소파 제외) 후쿠다를 지지한 결과이기도 하다.

## II. 국회소신표명

후쿠다 내각의 정책구상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10월 1일의 총리 '국회소신표명'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신표명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필자가 강조한 것이다.

○ <국회운영> 참의원에서 여야당 역전의 상황에서는 양원 결의가 상반될 경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야당과 중요한 정책과제에 관하여 성의를 가지고 대화하면서 국정을 추진한다.

○ <신뢰회복>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솔직하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필요한 개혁도 실현불가능하다.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긴급한 과제이다. 여당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야당과 충분히 논의하고자 한다. 2011년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기초적인 재정수지의 흑자를 달성하는 등, 세출, 세입 개혁을 추진한다. 간소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행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사회보장과 소자화(少子化)에 동반되는 부담증가에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장래 세대로의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다. 소비세를 포함한 조세체계의 발본적인 개혁의 실현을 추진한다.

○ <사회보장제도> 자립과 공생의 이념에 근거하여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문제도 국민의 입장을 경시한 것에 큰 원인이 있었다. 연금기록이 점검되고 바르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중요하다. 수혜자의 입장에서 조직과 운영 개선 등을 착실히 추진한다. 연금은 장기적 관점의 제도 설계가 불가결하다.

○ <안전과 안심의 정치> 소비자와 생활자의 관점에 입각한 행정으로 발상을 전환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한다. 올바른 식품표시와 수입식품의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의 확립이 필요하다. 학력을 높이고 체험활동과 도덕교육에도 힘을 쏟아 자립과 배려의 정신을 배양한다. 충분한 육아휴업을 얻을 수 있고 생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며 안심하고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한다.

○ <개혁과 성장> 개혁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자동차의 두 바퀴다. 내외투자 촉진을 꾀하고 아시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구체화하고 관광입국의 추진과 금융 경쟁력 강화에 착수한다. 세계최첨단을 목표로 하는 지적재산전략을 추진한다.

○ <격차문제> 지방과 도시가 서로를 지탱하는 공생의 사고방식으로 자치체에게 한층 더 큰 권한을 이양한다. 재정면에서도 자립할 수 있는 지방세 재정의 개혁에 착수한다. 도주세 실현의 검토를 가속화한다. 우정민영화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착실히 추진한다. '공격적인 농정'을 기본으로 하고 당사

자의 노력에 상응하는 지원을 행한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고 정규고용에의 전환 촉진과 노동 조건개선 등 일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시책을 추진한다.

○ <환경을 생각하는 사회> 주택수명을 연장하는 '200년 주택'의 착수는 구체적인 시책의 제일보. 홋카이도 토야호(洞爺湖) G8 서미트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별 50'에서 제시한 2050년까지 온난화 가스 배출량을 반감시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요 배출국이 모두 참가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착수한다.

○ <평화외교> 미일동맹과 국제협조는 일본 외교의 기본이다. 테러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지원은 테러리스트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행동이다. 이는 해상수송에 자원의 대다수를 의존하는 일본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또 마땅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기도 하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계속해달라는 요망도 있다. 활동 계속의 필요성을 국민과 국회에 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가도록 전력을 다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6자회담을 통하여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납치문제는 중대한 인권문제이다. 모든 납치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북일국교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행한다. 재일미군재편도 역지력 유지와 부담 경감을 배려하고 오키나와 등 지방의 절실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진흥에 전력을 다하면서 착실하게 추진한다. 미얀마에서 일본 국민이 사망한 것은 진실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아시아 외교를 추진하여 모든 아시아 제국에서 안정과 성장이 뿌리내리도록 적극적인 아시아 외교를 추진한다. 중국과는 전략적인 호혜관계를 확립하고 한국과도 미래지향적인 신뢰관계를 강화한다. 아세안과 경제연계 등 관계를 강화한다. 러시아와는 영토문제 해결을 향하여 끈기 있게 대응한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과 상임이사국 선출을 목표로 하고 세계무역기구 의 도하라운드도 조기 타결되도록 노력한다.

○ <마무리> 국민의 눈높이에서 개혁을 지속하고 '자립과 공생'을 기본으로 정책을 실행한다. 따뜻한 정치를 한다. 그 앞에 '희망과 안심'의 나라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 Ⅲ. 대북정책 전망

9월 25일자 교도통신에 의하면 미국 행정부는 후쿠다 내각 발족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일본의 대북정책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의 조속한 성과를 원하는 미국과 일본인 납치문제에 집착하는 아베 정권 사이의 균열이 심했기 때문에 후쿠다 총리의 '대화 중시' 외교 자세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보수우경적 해석을 우려하는 태도를 보여 왔고, 일본이 중국, 한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여 동아시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후쿠다 총리의 북일관계 인연은 부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부친인 후쿠다 타케오 전 총리가 1977년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한 이후 북일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는데

북한과 일본은 1977년 9월 '민간어업잠정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북한은 1981년 9월 '조일우호친선협회'를 결성한 바 있다.

물론 후쿠다 총리는 그 스스로 북일관계정상화에 적극적인 인물이다. 후쿠다 총리는 고이즈미 내각의 관방장관으로서 북일정상회담과 '평양선언' 합의에 깊게 개입한 바 있다. 당시 후쿠다 관방장관은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함께 북일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협상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다 수상은 2002년 일본에 일시 귀국했던 일본인 납치피해자 5명의 북한송환문제를 둘러싸고 '일단 돌려보낸 후 가족과 함께 다시 귀국시킨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에 반대하는 아베 관방 부상과 대립한 바 있다.

후쿠다 총리의 국회소신표명을 보면 납치문제와 관계정상화 문제를 병행하고자 하는 의도와 균형감이 충분히 읽혀진다. 소신표명에서 후쿠다 총리는 '납치문제는 중대한 인권문제이다. 모든 납치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실현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북일국교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총리의 소신은 10월 9일 중의원 답변에서도 재확인되었다. 후쿠다 총리는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2차대전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며 북일관계개선에 전후처리의 완성이라는 보다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하지만 납치문제 자체에 대한 대북강경입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버린 납치문제는 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재량권이나 정책소신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이슈가 되어버린 것이다. 10월 9일 후쿠다 내각이 각의결정을 통해서 10월 13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를 6개월 연장 결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북한 선박 입항 및 북한산 물품 수입 전면 금지 등 4개항의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후쿠다 내각의 이번 대북제재 연장 결의는 납치문제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후쿠다 총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에피소드로 해석된다.

#### IV. 일본국내정치 전망

일본 국내에서 후쿠다 총리에 대한 기대와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후쿠다 총리의 정치수완에 대해 '견실'하다는 낙관적 평가와 '선거관리내각에 불과하고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회의론이 대립하고 있다. 자민당 내부에서조차 후쿠다 정권의 앞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부키 문메이(伊吹文明) 자민당 간사장은 '야당에게 정책협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다나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정조회장은 '수상의 전도는 평탄하지 못하다. 개혁을 추진해야 하지만 생활에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민생활을 중시한 정책실행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야당의 반응은 더욱 비판적이다. 후쿠시마 사민당 당수는 '민의를 얻은 수상이 아니다'고 말했고 일본공산당도 민의를 얻기 위해서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했다. 오자와 민주당 대표는 '수상이 누가 되더라도 자민, 공명의 정권인 것은 마찬가지다. 모든 분야에서 불공정, 불평등, 격차를 만들어낸 정권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후쿠다 총리의 '대화중시외교', '아시아외교'에 거는 기대는 어쩌면 성급한 것인지도 모른다. 후쿠다 총리의 외교노선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후쿠다 정권의 국내적 권력기반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후쿠다의 '대화중시' 외교노선의 본격 가동은 쉬운 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후쿠다 정권의 성격이 태생부터 '선거관리내각'의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이미 다수당의 지위를 민주당에게 내어주었다. 후쿠다 내각은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때까지 권력기반을 안정화할 수 없다. 후쿠다 내각이 아베 정권의 개조내각처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료들은 아베 전 총리 집권 말기 인물이 대부분이고 전체 각료 17명 중 13명이 재임이다. 파벌보스들이 자민당 당4역에 포진한 것도 후쿠다 정권의 권력기반이 취약한 것을 상징한다. 둘째, 국내정책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후쿠다 총리는 당분간 국내정치에 전념할 가능성이 높다. 총리의 소신표명 내용의 대부분도 국내정책에 할애되어 있다. 후쿠다 총리는 9월 25일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정치불신해소'와 '연금문제해결'의 두 가지를 강조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아베 정권의 최대 실책으로 보고 향후 중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오는 11월 1일로 시한이 예고된 대테러특별조치법의 처리, 최우선 과제인 국민연금 문제 해결, 야당의 견제와 반대가 예상되는 내년 3월의 예산안 심의 등 국내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결국 시급한 국내정치 일정이 대외정책에 대한 관심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아베정권을 발족시킨 보수-강경세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이다. 이번의 자민당 총재선거의 득표내용을 분석해보면 자민당 9개 파벌 중 아소파를 제외한 8개 파벌이 모두 후쿠다를 지지했다. 그런데 득표내용을 보면 후쿠다 330표, 아소 197표였다. 의외로 아소 측이 선전(善戰)한 것이다. 자민당내 아소파 소속의원은 16명에 불과한데 아소는 의원표를 132표나 확보했고 각 도도부현에 3표씩 할당된 지방표에서는 아소는 65표(후쿠다 76표)를 얻었으며, 직접투표를 행한 35개 도도부현에서는 아소가 253,692표(후쿠다 250,613표)를 얻어 후쿠다에게 오히려 앞섰다. 이 득표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아소의 보수-강경정책을 지지하는 자민당 안팎의 지지세력이 건재하다는 것과 파벌정치에 반발하는 젊은 의원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아소 지지세력은 후쿠다의 '대화중시'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견제할 것이다.

## V. 마무리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화중시'의 후쿠다 내각이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북정책 기조 변화에는 상당한 시간과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인식에서 가장 진보적인 무라야마 총리 시절 한일역사분쟁이 가장 빈발했다는 역설적 사실을 상기시켜볼 필요가 있다. 총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대외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과거 고이즈미 총리처럼 강력한 권력기반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고이즈미 총리조차도 본인의 정책목표와는 다르게 일본의 대북정책 기류가 초강경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 결국 북일관계정상화를 위해서는 총리의 소신보다는 납치문제에 대한 북한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태도와 일본 여론의 균형감각 회복이 더 중요한 조건이라 하겠다. 후쿠다 내각의 발족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 중국 등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진정으로 '희망과 안심의 나라'가 되길 기대한다.(2007/10/15)

